

# ILO 기본권에 안전한 일터 추가... 고용부, '산재예방' 고삐

ILO, 노동자 기본권 선언 개정  
노동 기본권 4개 → 5개 확대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노력”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이 국제노동기구(ILO)의 노동기본권에 추가되면서 정부는 산업재해 예방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사업주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노동자들의 산재 사망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어 우려가 크다. 이번에 국제사회가 노동자들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기본권으로 채택하면서 정부의 현장내 산업안전보건 관련 점검도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ILO는 지난 10일(현지시간) 제네바에서 열린 제110차 총회에서 ‘노동 기본원칙과 권리선언’을 개정해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기본권 선언에 추가했다.

ILO 노동자 기본권선언은 기존 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한국노총

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의 효과적 인정, 모든 형태의 강제근로 철폐, 아동노동의 효과적 철폐, 고용과 직업상의 차별 철폐 등 4개에서 5개로 확대됐다.

이번에 ILO가 산업안전보건을 노동기본권에 추가하면서 관련 분야도 기

본협약으로 선정했다. 제155호 산업안전보건과 작업환경협약, 제187호 산업안전보건 증진체계 협약 2개다.

이들 협약에는 노사정 협의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마련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국은 2008년 두 협약에 대한 비준을 마쳤다. 이로써 기본

협약도 기존 8개에서 10개로 늘어났다.

기본협약에 2개가 추가되면서 ILO의 이행보고 주기는 6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는 등 이전보다 엄격한 점검을 받게 된다.

고용부는 “새 정부도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고용·노동 분야 국정과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정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일하는 모든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ILO는 2019년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을 노동기본권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선언문을 채택한 뒤 3년 간 노사정 논의를 거쳐 이번 기본권선언 개정을 마무리했다.

다만, 이번 논의에서는 개정된 기본권 선언과 함께 다른 국제협정의 관계에 대한 유보 조항도 채택됐다. 조항에는 개정된 기본권 선언이 회원국의 기존 체결한 무역협정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에 의도하지 않은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기본권 선언이 자유무역협정(FTA) 등 개별 협약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metroseoul.co.kr

## 육군 총장의 변신... 성공은 기본과 디테일



문형철 기자의

어수선하軍

위리어플랫폼으로 등장한 박정환 총장

박정환 육군참모총장은 지난 10일 경기 양주의 25보병사단에 특이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육군이 전투원의 전투력과 생존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위리어플랫폼 전투체계’가 적용된 복장을 한 것이었다. 육군의 미래 전투체계인 ‘아미타이거’의 한 부분인 ‘위리어플랫폼’을 총장이 직접 착용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장군의 입장에서는 전투력과 생존성을 극대화하는 장비 및 장구보다 장군 벨트와 구형방탄헬멧을 착용하는게 더 권위를 세우기도 좋고 몸에도 익었을 테니 말이다. 일각에서는 박 총장의 이번 모습을 보고 ‘육군의 수장이 보여주기식 이벤트’를 직접 시전하려는 것이냐’와 같은 부정적 반응도 나왔다.

이러한 지적이 나오는 것도 당연할지 모른다. 그동안 육군을 비롯한 국군은 ‘립서비스와 과장된 전시’를 통해서 미래를 제시했기 때문이다. 드론이 하늘을 날고 통신 네트워크를 갖춘 장갑차량에 탑승한 ‘위리어플랫폼’체계의 전투원들이 지상전을 지배하는 미래, 이는 한반도에서 자취를 갖춘 용맹한 ‘한국 호랑이’를 ‘백두대간(白頭大幹)’에 되살리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다.

‘아미타이거’와 ‘위리어플랫폼’ 등의 도입은 미국을 비롯한 군사선진국보다 20년 정도 늦었고, 두 전투체계의 상당 부분은 대한민국보다 국력이 낮은 중진국 수준에도 못 미친다. ‘보여주기식 이벤트’로 흘러간다면 육군은 멸종된 ‘한국 호랑이’가 될 것이다.

‘훈련 또 훈련’을 외친 박 총장이 ‘위리어플랫폼’을 입고 ‘아미타이거 전투

여단 창설식’을 주관한 것은 이러한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 사실 전임 남영신 대장과 전전임 서욱 대장은 ‘아미타이거’와 ‘위리어 플랫폼’에 상당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두 전투체계를 처음으로 공론화 시킨 김용우 대장은 육군참모총장 시절 의욕적으로 진행하려 했지만, 의욕에 비해 진단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때문에 박 총장이 보여준 의욕만큼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꾸준한 진단과 외부의 도움을 부끄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박 총장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깔려 있다. 현 정부는 ‘공세적 국방’을 주장하면서도 국방예산을 감축했다. 지속적이고 꾸준한 사업재원 확보가 쉽지 않다. 이전 정부는 ‘전시작전권 반환’을 위한 국방비 증액을 추진했지만, 실제의 효용성은 고려하지 않고 육군의 실전성과 적응성에 발목을 잡았다. 코로나19로 인한 장병들의 복무피로와 단절성도 문제다.

기본과 기초에 충실한 것이야말로 ‘아미타이거’와 ‘위리어플랫폼’의 성공과 직결된다. ‘왜 장성들의 권총이 유사시 자기방어에 유리한 자동권총이 아닌 리볼버일까’, ‘기능성 전투복인 컴벡서츠와 방탄복, 방탄헬멧을 더 전술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군복제를 개선해야 한다’, ‘유사시 전투원 개인이 필요로 하는 식수를 대량으로 조달할 방법은 무엇인가’ 등 작다고 치부한 디테일을 따져봐야 한다.

총장의 혼자가 아닌 육군 전체가 고민해야 한다. ‘그게 뭐가 중요해. 크고 많은 전차와 자주포라면 전쟁 이긴다’와 같은 낡은 사고를 흘러보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육군의 모든 구성원이 원활히 소통하는 촘촘한 그물이 되어야 한다. 잘 짜여진 그물은 원하는 물고기도 잘 낚는 법이다. 육군이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법령개선도 순풍을 달 것이다.

/문형철 기자 captin@

## “고교 때 미리 취업 보장”

# 일·학습병행 ‘도제학교’ 확대

지정 기관 연 최대 20억 지원  
2026년까지 전국 50개까지

고등학생 때부터 기업의 직무훈련을 받고, 취업을 보장받는 고교단계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도제학교) 10곳이 내년에 새로 추가된다. 정부는 오는 2026년까지 전국에 도제학교를 50개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도제학교로 지정된 특성화고나 기관은 연간 최대 20억원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13일부터 내년도 고교 일·학습병행 도제학교 참여 기관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고교단계일·학습병행제도는 우리나라의 학교 중심 직업교육과 독일·스위스의 산업현장중심 도제식 직업교육의 강점을 접목한 한국형 도제교육 모델이다. 학생은 2학년이나 3학년 때부터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이론·기초실습과 현장실무를 하는 학습근로자로 채용돼 취업을 보장

받는다. 기업은 재교육 비용을 절감하고, 우수 인력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산업계 주도형 도제교육 확대 및 일·학습 지원 강화라는 국정과제에 따라 2026년까지 전국 50개 도제학교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우선 내년 새로 10개 도제학교를 지정하고, 디지털 신기술 분야 및 서비스업 등으로 업종을 다양화할 예정이다.

도제학교에는 지난해까지 169개 특성화고, 2만3490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올해는 143개 특성화고에서 5772명의 학생이 참여한다.

도제학교로 선정되면 연간 최대 20억원 규모의 훈련시설·장비비와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로 선정된 기관에 훈련시설·장비비와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120%)할 방침이다.

모집 대상 기관은 7월 29일까지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세종=원승일 기자

## 해수부, 고수온·적조 대비 종합대책 운영

무인 적조 감시시스템도 운영

올 여름 고수온과 적조로 인한 양식 수산물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실시간 감시 시스템을 가동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해양수산부가 12일 밝힌 ‘2022년 고수온·적조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부터 실시간 수온 관측망을 추가 설치하고, 오는 7월부터 24시간 관측이 가능한 무인 적조 감시시스템도 운영한다.

고수온과 적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총 10개 지방자치단체에 총 78억원을

투입, 산소공급기, 저층수 공급장치, 차광막, 황토를 지원한다.

이처럼 정부가 고수온과 적조에 대해 감시 활동을 강화하는 이유는 올 여름 폭염 일수가 증가해 수온이 평년 수온(30년간 8월 평균, 26.2℃)에 비해 1℃ 정도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와 비슷한 7월 중·하순경에 고수온과 적조 위기 경보를 발령할 전망이다.

해수부는 14개 주요 양식 품종의 가격과 수급 동향 등의 관측 정보를 어업인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세종=원승일 기자

## 해수부

### 어업인 면세경유 보조금 지급

면세경유 기준가격 초과분 보조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은 이달부터 어업용 면세경유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달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5개월 간 사용한 어업용 면세경유에 대해 기준가격(1당 1100원) 초과분의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어업면세경유유가연동보조금사업’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해수부는 올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239억원을 지원한다.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최근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어업용 면세경유 가격이 지난해보다 2배 넘게 뛰었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수산물 소비가 줄어들어 어가 소득도 감소하는 등 어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어업인이 유가연동보조금을 받으려면 우선, 수협중앙회 유류구매사업정보시스템에 보조금을 받을 계좌를 등록해야 한다.

이후 매월 수협을 통해 지급 예정인 유가연동보조금 금액을 확인한 후 ‘보조금 지급 확인서’에 서명해야 한다.

해수부와 수협은 해당 금액의 적격성을 심사한 후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다만, 해수부와 수협은 유가연동보조금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어업인에게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 점검을 할 계획이다. 어업인이 해수부와 수협의 점검을 거부할 경우 보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김 실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어업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들에게 수산물을 적절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원승일 기자